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http://www.poddbang.com/ch/9938>

2015년 10월 21일(수)

오늘 다소 늦은 업데이트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일찍 업데이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강남순 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 브라이튼신학대학원 교수의 “역사 ‘국정화’라는 이름의 욕망”의 일부분이다.

“사실들이란 없다, 다만 해석들이 있을 뿐이다.’ 니체의 이 말은 고정된 사실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근대인식론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절대적 ‘사실’이란 없고,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탈근대 담론의 등장을 예비한다. 국정화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역사를 보는 관점과 해석들의 ‘다양성’을 억누르고 ‘획일성’을 강요한다는 점에 있다.

식민중주국이 식민지인들을 지배하는 데에 쓰였던 ‘통제의 도구’들 중의 하나는 ‘책’이었다. ‘고정된 텍스트’로서의 책은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공적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체주의 체제에서 정치가들이 우선으로 사용하는 ‘통제의 도구’는 책으로, 이 책은 ‘획일화된 지식’ 확산의 통로가 된다. ‘획일화된 지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들’이라는 낙인을 찍고, 반역자로서 추방되며, 관점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나쁜 것’ 또는 ‘위험한 것’과 동의어로 만들어진다.”

강남순 교수는 그러니까, 현 정부의 국정화에 있어 교과서가 통제의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제언을 한다.

“국정화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교과서들이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생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공론화해야 한다. 국수적 민족주의를 넘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개방적 민족주의 또는 초민족주의적 시각, 그리고 근대적이 아닌 탈근대적이고 탈식민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그 동안 ‘생략’되었던 문제들에도 치열하게 개입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인종, 젠더, 성적 지향,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에 근거한 다양한 차별의 문제들은 물론 한국과 세계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와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 등이 ‘생략’된 역사교과서는 현재와 미래를 포괄적으로 보지 못함으로써 ‘죽은 교과서’가 된다.”

<https://www.hankookilbo.com/v/c8f1bf00526843478174fe36bbaa5959>

그렇다. 교과서가 절대적 텍스트로써 규정되는 것은 금물이며, 교과서를 넘어서는 보다 많은 자료와 식견에 학생들이 당당히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과서 국정화의 대안이 꼭 검인정 교과서 수호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남순 교수는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FTA 등 조속한 국회 비준 그리고 내년 예산의 법정 시한 내 처

리 그리고 기타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내일 낮 3시 청와대에서 5자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선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성과를 설명하고,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한중 FTA의 국회 비준 등이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정책이 필요해서 예정되지 않았던 걸 시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교육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방침이 공식 발표된 바로 다음 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교과서 개발 예산 44억 원을 예비비로 의결했습니다. 예비비는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고 사용 내역을 사후에 승인받으면 됩니다.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군 같이 (IS에) 가담하려고 하는 친구가 2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출국금지를 했고, 여권도 회수를 했다...”

국정원 출신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가담한 김 모 군의 행방이 지난 5월 이후 파악이 안 돼,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폭탄 원료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IS 동조 외국인 5명도 적발됐습니다.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이리)가 출간됐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스24 <http://goo.gl/ndhoaj>
알라딘 <http://goo.gl/AkxzHD>
교보문고 <http://goo.gl/5KLODn>
G마켓 <http://goo.gl/HDXK0l>

■ 제공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컴백홈대리운전 <http://www.facebook.com/CBH.ComeBackHome>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연지연곰탕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 광고문의] kimyongminpd@gmail.com

[한겨레] 베트남도 검정 채택...‘박근혜표 교과서’만 거꾸로 간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역사 과목을 포함한 전체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베트남은 북한·방글라데시 등과 함께 국정제를 전면적으로 채택한 국가로 분류돼왔다. <한겨레>가 20일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의 인터넷판인 <베트남 공산당 전자 신문>의 기사를 확인한 결과, 베트남 정부는 지난 4월20일 ‘하나의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과서’를 핵심으로 하는 전면적인 교육과정·교과서 개편안을 비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교육부 산하 교육과정연구소와 국가에서 경영하는 교육출판사가 교육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교과서의 집필·발행·배급을 관장해왔다. 그러나 경제 부문 개혁·개방 이후 교과서 발행의 국가 독점에서 오는 폐해를 인정하고 국외 기관들과 협력해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해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베트남 정부에 ‘국정 교과서 폐지’를 권고한 보고서서를 채택했다. 특히 베트남은 그동안 한국을 ‘모범’으로 삼아 교육과정과 교과서 발행체제 개정 작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남들이 좋다고 배워간 검인정교과서를 버리고, 남들이 버린 국정교과서로 가려는 것이다. 사실상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

트남마저 국정 교과서를 폐기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교과서 전환은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3646.html

[국민일보, 경향신문]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 해부] '유관순 열사' 동영상 논란

교육부가 검정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유관순 열사' 동영상이 논란에 휩싸였다. '자기 피에 넘어갔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페이스북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유관순 열사편'이란 동영상을 올렸다. 광고 형태로 지상파에도 방송됐다. 40초 분량의 동영상은 1919년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나눠주다 체포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 고문당한 사실 등을 소개했다. 후반부에 한 여학생이 역사 교과서를 덮으며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라고 독백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어 '2014년까지 일부 교과서에는 유관순은 없었습니다' '유관순은 2014년까지 8종의 교과서 중 2종은 기술이 안 되었고 2종은 사진 없이 이름 등만 언급되었습니다'라는 자막이 흐른다. 그러나 동영상 내용과 달리 교과서의 유관순 열사 기술은 오히려 현행 검정체제에서 강화됐다. 도리어 1979년 유신정권에서 발행한 국정교과서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고교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였다. 유관순 열사를 소홀하게 다룬 건 과거 국정교과서였다는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균형 있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사례를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88325&code=11131300&cp=ny>

[한국일보] 헌법학자들 "국정화로 헌법가치 구현? 국정화 자체가 헌법 위배"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헌법 가치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국내 주요 헌법학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 일"이라며 "헌법이라는 단어를 오·남용 하지 말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 전공 교수 5명은 전원이 국정 교과서 도입이 대한민국 헌법 조항 및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응답했다. 한국헌법학회는 헌법 전공 교수와 현재 연구관 등 헌법 관련 실무자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된 헌법관련 국내 최대 연구단체다. 헌법학자들은 특히 국민의 교육권을 명시한 헌법 조항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방 교수는 "헌법 제 31조 6항에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 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는 내용이 적시 돼 있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규칙보다도 낮은 수준의 장관 고시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통째로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정화 홍보 논리로 '헌법 가치'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 언론인들도 이미 비판한 바 있다. 지난 16일 외신 기사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새로 만들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토대로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 시장경제는 선택의 자유가 핵심인데 정부의 역사교과서 추진은 오히려 이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외신 기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http://www.hankookilbo.com/v/81219a0fc7194de4a311d8887d3b6058>

[한국일보] "김재춘 교육 차관 경질, 황우여 향한 靑의 경고"

어제 이임식을 열고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물러났다. '실세 차관'으

로 꼽힌 그의 경질은 뜻밖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영남대 교수 시절인 2009년 논문에서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라고 밝혔던 점이 발목을 잡았다는 뒷말이 나온다. 하지만 "변질" 비난까지 감수하며 현 정부 정책을 이끌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경질 사유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이런 가운데 김 차관의 전격 교체는 청와대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관점을 전한 소식통은 "대통령의 국정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황 부총리는 몸을 사렸고, 교육부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방침 결정 이후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고 말했다. 반발 여론을 미리 의식해 국정화 당위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거의 준비하지 않았던 데다 여론 조성을 위한 여론지도층, 학계 등과의 접촉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야권과 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제일 앞장서 대응해야 할 황 부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수동적인 방어에 그쳤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국정화에 대해 "과격할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 "국정화 영원히 하자는 것 아니다" 등의 잇단 발언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케 했다는 후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임기 내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싸워줘야 할 분이 총선만 바라보는 '자기정치'를 하고 있으니 좋게 보일 리 있겠느냐"고 말했다.

<http://www.hankookilbo.com/v/788864f47b4542809eb4b0365e2d2a43>

[한겨레] 황우여 "과거 역사전공자 시위로 공부안해 교육부실" 발언 논란

이런 가운데 황우여 부총리가 "과거 대학의 역사 전공 학생들이 시위 때문에 학업을 잘하지 않아 지금 역사 교육이 잘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황 부총리는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이사회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학 총장들에게 "사학과 학생들이 과거 거리로 많이 나와 대학도 역사 과목을 많이 신경 쓰지 않았고 이 때문에 역사 교육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교육을 덜 받았다는 것인가, 유신 역사 교육을 말하는 건가.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학 총장은 "황 부총리가 대학교수들이 집필 거부 선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이 나오지 않았고, 교과서를 집필할 것이냐고 (교수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니 힘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황 부총리의 고충이 느껴진다. 이리다 황 부총리마저도 국정화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다. 황 부총리는 지난 18일 방송에서는 "국정보다 자유발행제가 더 낫다"고 말해 보수 진영에서조차 '황 부총리가 오락가락한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계는 황 부총리의 후임으로 '거물급'의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뉴스의 재구성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다. 오늘 제목은 '이산가족,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이다. 통일 대박론 같이 남북화해일치 그러니까 경제적 양극화해소 없는 통일, 이산가족 만남은 더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문제인식이 숨어있다. 들어보자.

[관련 사이트] <http://family.kbsarchive.com/>

[경향신문] [남북 이산가족 상봉] 부모·자식 상봉 5가족뿐 대부분 '사별'...정례화 서둘러야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26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단의 대부분은 80대 이상이다. 1차 북측 상봉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80대다. 2차 상봉에 나설 남

측 상봉자 90명 중에선 89대 이상이 90% 가까이 된다. 부모 세대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부모·자식 상봉도 크게 줄었다. 1차 상봉 97명 중 부모·자식 상봉은 5가족에 불과하고, 남측 90명의 2차 상봉에서도 12가족에 그친다. 신청자의 절반 정도가 부모·자식 상봉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들 중 대부분이 이미 '사별'한 상태인 것이다. 이산가족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중 70대 이상은 81.6%에 달한다. 올해 말이면 상봉 신청자 중 사망자가 생존자보다 많아지고, 2032년이면 신청자 중 대부분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면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봉 정례화가 우선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처럼 비정기적, 일회성 상봉에 그칠 게 아니라 분기나 격월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봉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면 상봉 이외에 생사 확인이나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상봉 방식도 필요하다. 정치권도 20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맞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는 상봉 정례화는 물론 상봉 방법도 다양화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규모와 횟수를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02313275&code=910100

[조선일보] 日, 한국 동의 없어도 '자위대 對北작전' 가능성 시사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20일 서울 국방부에서 만나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회담에서는 한국의 영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한·일 양국이 이견을 보였다. 한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답을 유보했다. 일본 방위성은 나카타니 방위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고 일본은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갈 경우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이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1/201510210267.html

[조선일보] 롯데 형제 "아버지 집무실 확보하라" 닷새째 쟁탈전

서울 도심 최고급 호텔 내 615㎡(약186평)짜리 대형 스위트룸이 대한민국 5위 재벌인 롯데그룹 오너 형제들의 경영권 전쟁터로 변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0여년 전부터 집무실 겸 전용 숙소로 쓰고 있는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 공간이다. 이곳에서 그의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이달 16일부터 닷새째 아버지 집무실 쟁탈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선공(先攻)을 가한 것은 신동주 회장 진영이다. 올 8월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승리한 동생 측이 집무실 통제권을 확보해 놓고 있던 이곳에 신동주 회장 측이 16일 기습 방문한 것. 동생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장남 측은 신동주 회장이 최근 세운 SDJ코퍼레이션의 직원들을 대거 배치했다. 롯데그룹과 SDJ 측 직원들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각각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차남 측은 어제와 그제 연이어 "(SDJ)코퍼레이션 소속의 외부 인자들이 34층에서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재계의 한 고위 인사는 "이번 사태가 대기업과 사회 지도층 망신을 넘어 우리나라의 국격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치졸한 싸움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1/201510210227.html

[한겨레] 국회의원실 인턴들도 '더이상은 못 참아'

국회의원 의원실에 근무하는 인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회판 열정페이' 주장을 제기했다. 의원실 인턴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국회청년유니온'은 "21일 서울 영등포구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합원 수는 10여명이며, 이들이 일하는 국회의원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여야 모두에 걸쳐있다. 이들이 노조까지 결성해가며 처음 개선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이다. 국회 인턴들은 기본급 120만원에 시간외 근로수당 13만 7760원을 합해 월 133만 7760원을 받는다. 기본급만 놓고 보면 올해 최저임금 116만 6220원 보다 조금 많지만, 시간외 근로수당을 뭉뚱그려 포괄임금으로 받는 탓에, 실제 노동시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국회청년유니온 초대 위원장을 맡은 김제남 정의당 의원실의 이영철 인턴은 "국회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선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노조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13700.html>

[한겨레] 월급 대신 우유로...서울우유의 '갑질'

서울우유가 직원들 월급 일부를 돈 대신 우유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우리나라 돈으로(통화불), 전액(전액불), 직접 노동자에게(직접불), 정기적으로(정기불) 지급해야 한다.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이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부터 우유 소비 촉진 운동을 벌여오다 '내부적으로도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얘기가 나와 추진한 것으로, 자발적 운동이었지 강제적인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동법률원장)는 "결국 중요한 것은 자발성인데, 대다수 노동자가 한꺼번에 내부 판촉에 참여하고, 일상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직원들한테 물건을 살 기회가 주어졌던 게 아니라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13610.html>

[한겨레] 미친 전월셋값에 "어찌 살란 말이나"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6일 펴낸 보고서를 보면, 전셋값은 2년 전보다 27%나 올랐다. 특히 반전세·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 월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순수 월세는 18.5%, 보증부 월세는 16.0%로 전세 세입자(12.1%)보다 높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20대의 경우 월세로 내야 하는 돈이 평균 월 소득의 23.4~26.6%에 이른다. 이날 세입자 모임을 마련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데도 정부는 건설사 배를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에만 몰두하고 있고,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든 국회의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개점휴업 상태"라며 "전월세 문제 해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와 국회에 '버럭' 소리라도 함께 질러보자는 취지에서 뭉쳤다"고 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3695.html

[국민일보] [기획] 거센 분양열풍... 공급과잉 폭탄?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분양 열풍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세난과 함께 무섭게 치솟는 전세가

에 지친 세입자들이 매대수요로 전환된 영향이 크다. 건설업계에서는 몰아치기 식으로 물량을 밀어내면서 분양·인허가 물량이 폭증하고 있다. 자칫 집값 폭락 등 2007년의 공급 과잉 후폭풍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때 경기가 침체되면서 미분양이 급증하고 집값은 급락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무주택자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계약자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하면서 이른바 입주대란까지 발생했다. 국내 건설사들은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대거 떠안게 됐고 재무상태가 급속히 악화됐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87834&code=11151500&cp=ny>

[세계일보] 정부, 물 부족 예견하고도 손 놓고 있었다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충남지역에 제한급수가 1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같은 가뭄을 예고하고도 그동안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가 2011년 12월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11~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1억6000만~4억6000만의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하천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수자원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계획에서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지하댐 등 대체수원 개발을 통한 수원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댐-보 연계운영, 스마트 물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존 수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공염불'에 그쳤다. 스마트 물 관리의 기본인 국가 물 관리 컨트롤타워도 논의만 분분할 뿐 진척이 없다. 물 관리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가 역할에 맞춰 나눠 맡고 있다.

<http://www.segve.com/content/html/2015/10/20/20151020004410.html?OutUrl=naver>

■ 오늘의 날씨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강원도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점차 흐려져 늦은 밤부터 비(강수확률 60%)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의 예상 강수량은 5~10mm다.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전날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됐다.

■ 오늘의 칼럼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이하경 중앙일보 논설주간의 칼럼 "'용인 캣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의 일부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겠다.

"고양이는 사라져야 할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고양이를 일시적으로 몰아낸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1층 베란다와 거실까지 쥐가 들어왔다. "길고양이는 페스트, 유행성 출혈열, 쓰쓰가무시 등의 무서운 전염병을 퍼뜨리는 쥐들의 가장 강력한 천적입니다." 한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나눠준 협조문 문구다.

중국 대약진운동 시기인 1958년 마오쩌둥은 참새와의 전쟁을 벌였다. 절대권력자였던 그가 농촌 시찰 도중 한마디 하자 소탕작전이 벌어졌다. 마오는 벼 이삭을 쪼아 먹는 참새를 없애면 풍년이 들어 인민들이 배불리 먹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거꾸로 대홍작이 닥쳤다. 참새는 쌀벌레와 메뚜기를 잡아먹는 천적이었던 것이다. 2억 마리 이상의 참새가 희생된 뒤에야 소탕전은 중단됐다. 소련 연해주에서 참새 20만 마리를 공수하고 병아리까지 풀었지만 수천만 명이 굶어죽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른 생명체가 서로 의존해 살아가는 운명공동체다.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와 손짓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작은 벌레도 우주적 질서의 눈으로 보면 결코 열등하지 않다.

어떤 인연도 없는 길고양이에게 다가간 용인 캣맘은 세상을 바꾸고 있다. 내가 비록 너와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지만 경계를 허물고 친구가 되겠다는 결단과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함석헌 선생은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고 했다. 미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캣맘 사건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성숙한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olink/18449599>

::: 김용민 새 책 안내



"우리는 왜 오늘 로마서를 읽어야 하나. 로마서는 2016년에 사는 한국 개신교인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로 봐도 되기 때문이다. 극도의 배타를 하면서 이와 양면인 고립을 경험하는 로마 교인의 처지는 한국 교인의 그것이다. 또한 로마서는 2016년을 사는 한국 민중에게 보내는 편지와 다르지 않다. 극도의 저항을 표하며 이와 양면인 탄압에 직면하던 로마 이민자의 처지가 한국 민중의 그것이다. 하기가 2016년만이라. 억울하고 눌린 자의 원한이 극에 달해 폭발하면서 고비를 형성하고, 이 번곡점에 등장한 지도자가 연거푸 민중을 기만하기 급급해 하는 과정은 세계사의 전형이었다. 로마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의 근원을 설파한다. 그렇다고 이 책이 또 하나의 로마서 해설서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선 사람을 염두에 두며 기획했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기독교 신앙 원리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몇몇 개신교인의 비리 추행 등 일탈에 기댄다. 이러다보니 그 비판의 종국은 인상비평에 그치고 만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기독교 비판에 보다 더 큰 합리성과 논리력을 실어줄 것이다. 다만 당신을 기독교에 귀의케 할 여지도 있다." (김용민 저, 10월 20일 출간 예정)

[교보문고] <http://goo.gl/nbfd8Q>